

기획보고서 06-015

미국의 대중 통상정책 변화와 전망

kotra 해외조사팀

목 차

I. 미국의 대중 통상정책 현황	1
1. 연혁	1
2. 통상정책의 변화	3
3. 미 정부 및 의회 동향	4
4. 주요 업계 반응	7
II. 향후 정책 방향	9
1. 시장 접근도 제고	9
2. 미 통상법 집행의 강화	11
3. 불공정 무역 관행 및 제도의 개선	12
4. 미-중 통상 이슈에 대한 사전적 해결	13
5. 신규시장영역 개척 및 수출 진흥	14
III. 영향 및 대응 방안	15
1. 영향	15
2. 정부 및 기업의 대응 방안	17

요 약

미국의 2005년 무역적자가 역대 최고 수준인 US\$ 7,260억에 달하며, 그 중 대중 무역적자가 27% 이상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되면서 미국 내 의회 및 업계의 불만과 압력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

미국 정부는 현재 중국의 환율 조작과 지적 재산권 침해, 보조금 정책 등이 양국간의 공평한 무역기회를 감소시켜 공정하고 영속 가능한 무역관계를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와 관련하여 미 의회는 중국에 대한 항구적 정상교역국가 지위 철회, 중국산 모든 제품에 대한 27.5% 보복성 관세 부과 등의 법안을 발의하고 다양한 수입 규제 움직임을 보이면서 과거보다 더욱 강력한 대중 통상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USTR은 2006년을 미-중간 새로운 통상 관계의 정립이 필요한 시점으로 규정하고, 중국이 국제무역시스템 내에서 보다 주도적인 국가로서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USTR은 향후 대중 통상전략 6대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5대 핵심 이행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대중 통상 전략 6대 목표

- 1) 국제기구 및 국제협정에의 적극적 참여
- 2) 국제 통상 규범의 이행과 준수
- 3) 미 통상법 집행의 강화
- 4) 무역장벽 완화 및 경제 개혁
- 5) 미국의 대중 수출 증대
- 6) 통상 이슈에 대한 사전적 발굴과 해결안 제시

○ 5대 핵심 이행사항

- 1) 시장 접근도 제고
- 2) 미 통상법 집행의 강화
- 3) 불공정 무역 관행 및 제도의 개선
- 4) 미-중 통상 이슈에 대한 사전적 해결
- 5) 신규시장 영역 개척 및 수출 진흥

무역적자의 누적에 따른 보호주의와 고립주의 강화는 이와 같이 과거보다 한층 강경화된 통상정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중국과의 교역 및 투자관계가 큰 우리나라의 수출입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와 기업은 동 정책 변화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전문가 그룹을 육성, 과거와 달리 글로벌화 된 경영 환경을 감안하여 제3국 통상 정책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한-미 FTA 협상을 포함한 '06년 미국의 주요 대한 통상 이슈를 미리 충분히 검토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기업에서도 중국에 편중된 투자구조 및 투자 기업의 수출 중심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로 인하여 對中 통상 마찰 발생시마다 휘둘리는 경향이 높은 것을 감안,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와 해외 소싱 포트폴리오를 재구성 하는 등의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겠다.

I. 미국의 대중 통상정책 현황

1. 연혁

□ USTR 보고서

○ 미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06년 2월, '미-중 통상관계1' 보고서를 발간함.

- 동 보고서는 미-중 통상관계의 변화된 모습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통상 정책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미국의 대중 통상 정책의 흐름

- USTR은 미-중 통상관계 변화를 시기별로 3단계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 통상 현안과 대중 통상정책 목표, 정책 시행 결과 등을 분석함.

① 1단계 (1986년~2001년): 중국의 GATT/WTO 가입 준비시기

- 중점 목표는 중국을 규범 중심의 국제무역시스템 하에 편입시키는 것이었음.

- 이 목표는 2001년 말 중국의 WTO 가입으로 달성되었으며, 중국은 경제 전반에 걸친 무역 장벽을 해소하고, 외국 물품 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내국민대우2)를 제공하며, 지적 재산권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개혁에 합의함.

1) U.S.-China Trade Relations: Entering a New Phase of Greater Accountability and Enforcement (Top-to-Bottom Review), February 2006,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2)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외국상품(서비스) 및 상품(서비스)공급자에 대하여 국내상품(서비스)공급자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거나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함.(GATT 제3조)

② 2단계 (2001년~2005년): WTO 가입 후 4년의 기간

- 정치 경제 등 다방면에 걸쳐 미-중 양국의 관계가 심화되었으며, 양국의 관계 성숙에 따라 대화와 국제기구를 통한 통상마찰 해결능력이 지속적으로 제고되었음.
- 주요 목표는 중국의 국제무역시스템 내 통합 상황을 감시하고 가입 시점부터 시기별로 예정되어 있는 WTO 의무사항을 중국이 철저히 이행하게 하는 것이었음.
- 미국의 대 중국 WTO 의무사항 이행성과 평가는 관세율 인하의 적시성, 서비스 부문의 시장 접근도 증대, 지적재산권의 보호, 비관세 장벽의 완화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음.

③ 3단계 (2006년~향후): 핵심 의무사항 이행시기

- WTO 가입 초기 단계를 지나 더욱 민감한 의무사항의 이행이 필요한 시기로, 미국은 중국이 단순한 국제무역시스템 내 참여국 수준에서 벗어나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함.

□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통상 관계

- 세계 2차대전 이래로 미국은 다음의 2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었으나, 중국이 EU, 일본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교역 상대국의 하나로 성장하고, 양국간의 통상 관계가 3단계에 접어들어 따라 금년부터 새로운 원칙을 추가함.

- ① 개방화된, 규범 중심의 국제무역시스템을 정립함.

② 규범 중심의 개방화된 국제무역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획득함.

③ 미국의 수출 기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양국간의 공평한 무역 기회를 증대시키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무역관계를 정립함. (신규)

○ 상기 3가지 원칙의 이행을 위하여 미국 정부는 6개의 대중 통상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1) 국제기구 및 국제협정에의 적극적 참여, 2) 국제 통상규범의 이행과 준수, 3) 미 통상법 집행의 강화, 4) 무역장벽 완화 및 경제 개혁, 5) 미국의 대중 수출 증대, 6) 통상 이슈에 대한 사전적인 발굴과 해결안 제시

2. 통상정책의 변화

□ 정책 변화의 배경

○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2005년 말 기준 US\$ 2,020억으로 그 증가 폭이 24.5%에 달하는 등 무역 불균형이 심화됨.

< 대중 무역 적자 추이 >

(단위: US\$ 백만, %)

	2003	2004	2005	증가율
수출액	26,368	34,744	41,837	20.41
수입액	152,436	196,682	243,462	23.78
무역수지	△124,068	△161,938	△201,626	24.51

자료: World Trade Atlas

○ 미 정부 및 의회는 이러한 무역 불균형은 미국 제품의 경쟁력 저하가 아닌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다양한 통상 압력을 가하고 있음.

- 가장 심각한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중국의 환율조작, 지적재산권 침해,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 다양한 시장 장벽을 지적함.

□ 환율 조작과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

○ 중국의 환율 조작과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가 대중 통상 압력의 가장 큰 원인으로, 환율 조작국 지정 및 지적 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WTO 제소 움직임도 나타남.

3. 미 정부 및 의회 동향

□ USTR(미국 무역 대표부)

○ 중국의 관세장벽 완화 및 지적재산권 집행 강화

- 룩 포트만 USTR대표는 2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4월 11일 워싱턴에서 열릴 연례 미-중통상합동회의³⁾ 이전에 이 두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함.

3) 미-중 통상합동회의(Joint Commission on Commerce and Trade; JCCT)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통상문제를 해결하고 상업기회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 대 정부 협의체임.

- 만약, 중국이 이 두 문제에 대해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경우 WTO 제소를 심각하게 고려할 것이며 이를 위한 실무적 준비가 진행 중이라며, 중국 측을 압박함.

□ 미의회

○ 중국에 대한 항구적 정상교역국가지위⁴⁾ 부여 철회 움직임

- 도건 상원의원과 그라함 상원의원은 중국의 항구적 정상교역국가지위를 철회하고 '00년 이전의 상태와 같이 정상교역국가 지위를 매년 의회에서 재검토할 것을 2월 9일 발의 법안을 통해 주장.

○ 보복성 관세 부과 움직임

- Schumer-Graham 법안은 중국이 위안화를 절상하지 않을 경우 중국으로부터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27.5%의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동 법안의 공동 발의자인 그라함 상원의원과 수머 상원의원은 3월의 중국 방문 이후 동 법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강행할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밝힘.

4) 항구적 정상교역국가지위(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PNTR): 특정국가와 무역을 함에 있어, 다른 국가들과 동일한 통상조건을 적용하는 정상무역관계(Normal Trade Relations; NTR)를 영구화 한다는 개념으로, NTR은 국제통상법상의 최혜국(Most Favored Nation; MFN) 대우와 동일한 개념임.

- 그러나, 그라함 의원은 2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3월의 방중 기간 동안 환율정책에 대한 중국의 전향적 자세를 확인할 수만 있다면 표결을 연기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 USTR의 중국의 무역관행 감시 강화 요구

- 하원세출위(House Appropriations Committee)의 울프 의원 등은 2월 16일 USTR의 2007 회계연도 예산관련 청문회에서 미국이 환율, 지적재산권 집행, 무역적자 등 산적인 대중관계 문제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USTR 예산 증액 필요성을 언급함.
- 해치, 스탭나우, 바쿠스 상원의원은 2월 17일 USTR내 Chief Trade Enforcement Officer를 설치하여 중국 등 주요 교역대상국의 무역관련 법규의 집행 및 준수여부를 감시하게 하는 Trade Competitiveness Act of 2006 법안을 공동 발의함.

○ 인터넷 통제국가로서의 수입 규제 요구

- 하원국제관계위원회 소속 크리스토퍼 스미스 의원은 2월 16일 Global Online Freedom Act of 2006 법안을 발의함.
- 동 법안은 중국 등 인터넷 검열 국가를 '인터넷 통제국'으로 분류하고, 국무부와 상무부가 운영하는 '수출통제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에 이들 국가로부터의 수출품을 신규 규제하도록 요청함.

□ 기타 행정부처

-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FRB) 의장은 2월 16일 상원금융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중국의 환율정책에 대해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힘.
- ‘중국의 고환율이 (중국의) 수출 증대에 기여하고는 있지만 결국 좀더 유연한 환율 도입, 금융 분야 독립의 강화, 수출 의존도 감소, 세계 금융 및 무역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중국의 이해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음.
- 일각에서는 ‘중국의 고환율이 (중국의) 수출 증대에 기여한다’는 발언 자체가 전임자 그린스펀에 비해 중국의 환율 정책에 대해 훨씬 적극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4. 주요 업계 반응

□ 환율조작 관련

- 미국의 통상전문지인 Inside US Trade에 따르면 미국의 주요 업계 측이 미 재무부가 금년 외환보고서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명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힘. ('06. 2. 22)
- 동 기대는 1) 4월로 예정된 미중 통상합동회의(JCCT)와 후진타오 방미 때까지 위안화의 절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중관계에 전환점이 도래할 것이며, 2) 올해 선거를 앞둔 공화당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력 증가가 예측되며, 3) 존 스노우 재무장관이 최근 '미국은 중국의 환율 관련 조치 수준에 여전히 불만' 이라고 언급한 바에 근거를 두고 있음.

- 중국 환율을 감시하는 미국 내 이익단체인 China Currency Coalition은 미국의 스테인레스강 이음쇠(fittings) 업체들이 중국산 저가제품의 미국 시장 내 증가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06. 2. 16).
 - 동 단체는 중국정부의 환율조작과 보조금 지급 등과 불공정 무역 관행이 중국산 저가 제품 범람의 주 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음.
- 미-중 통상 전문지인 Inside US-China Trade는 전미제조업협회(NAM) 대표들이 현재 중국의 환율 관련 입법을 고려중인 찰스 그래스리 상원재정위원장과 만나 입법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함. ('06. 2)

□ 지적재산권 관련

- 미국 내 지재권 보호관련 이익단체인 IIPA(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는 USTR에 '중국을 계속해서 USTR의 Special 301 Priority Watch List에 등재시켜 줄 것'을 서한으로 요청함. ('06. 2. 15)
 - 한편, 동 서한에서 IIPA는 4월 11일 미-중 통상합동회의(JCCT) 개최 이후 동 권고사항에 대해 재검토할 것이며, 그때까지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에 개선이 보이지 않으면 중국을 Priority Foreign Country로 분류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힘.

II. 향후 정책 방향

□ 5대 핵심 이행사항

- 미국은 중국이 국제무역시스템 편입에 따라 막대한 수혜를 입은 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책임감 있고, 주도적인 역할을 촉구함.
- USTR은 앞에서 언급한 6대 대중 통상전략 목표⁵⁾의 달성을 위하여 5대 핵심 이행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 5대 핵심 이행사항은 1) 시장 접근도 제고, 2) 미 통상법 집행의 강화, 3) 불공정 무역 관행 및 제도의 개선, 4) 미-중 통상 이슈에 대한 사전적 발굴, 5) 신규시장영역 개척 및 수출 진흥 등으로 요약됨.

1. 시장 접근도 제고

□ 국제 협약 및 표준화 조약 가입

- 중국은 지역별, 산업별로 다양한 무역진흥 관련 기구 및 협약의 회원국으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중국의 정치/경제적 지위에 대비하여 미흡한 상태이며, 세계 표준화 작업에도 제한적인 형태로만 참여하고 있음.
- 미국은 중국을 무역 진흥 관련 조약 및 국제 표준화 조약에 가입시킴으로, 중국의 차별적인 기술 표준 도입을 통한 외국기업에 대한 시장 진입장벽구축을 차단하고자 함.

5) USTR의 대중 통상전략 목표 6가지: 1) 국제기구 및 국제협정에의 적극적 참여, 2) 국제 통상규범의 이행과 준수, 3) 미 통상법 집행의 강화, 4) 무역장벽 완화 및 경제 개혁, 5) 미국의 대중 수출 증대, 6) 통상 이슈에 대한 사전적인 발굴과 해결안 제시

- DDA 협상에의 적극적인 참여 및 정부조달협약(GPA), WIPO 인터넷 조약, 국제수역사무국 등에 가입을 촉구함.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통신 연합(ITU), 국제전자기술위원회(IEC) 및 미국전기전자학회(IEEE) 등의 국제 표준화 조약 가입을 촉구함.
- 미 국무부는 중국 대사관 내 최소 7명 이상의 관리를 추가로 파견하여, 미국의 이해와 관련된 중국의 경제 개발 상황 및 무역 규범 준수 여부를 감시, 보고하게 함.

□ 각종 관세/비관세 장벽 완화

- WTO 규정에 위배되는 서비스시장 진입장벽, 동식물 위생 규정 및 반덤핑 법규 등의 철폐, WTO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 규정 및 품질적합판정절차의 시행을 촉구하여 법규 및 기술 장벽의 철폐를 통한 미국 상품의 수출 증대를 촉진함.
- 영상·음반물 및 도서 등 지적재산권 중심 산업의 시장 장벽을 완화하고 유통, 통신 및 기타 서비스 산업, 금융 산업 부문의 외국 자본 규제 장벽의 제거를 통한 시장 접근도의 제고를 요청함
- 미국의 경쟁력이 높은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가 WTO 규정에 위배되는 부분이 많아, 동 비관세 장벽의 완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대중 수출 증대효과가 다대할 것으로 예상됨.

2. 미 통상법 집행의 강화

□ 반덤핑 규제 강화

- 현재 중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약 70개의 반덤핑 제소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최다 진행 국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업체가 수출지를 변경하여 관세를 회피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미 정부는 향후 미 국경의 통관 절차의 강화 등을 통하여 미국의 통상 구제법 및 중국과의 관련 협정 등을 보다 강력하게 집행할 것을 예고한 바 있음.
 - 반덤핑 규제, 1974년 수정 통상법 201, 421조, 1930년 수정 관세법 337조, 미-중 섬유관련 양해각서 등과 관련한 법 집행의 강화가 예상되며, 특히 반덤핑 관세를 불법적으로 회피한 제조업체에 대한 추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위조품 및 불법·강제 노역 생산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 강화

- 미국 국경 및 항구를 통해 수입되는 중국산 위조 및 해적판의 연간 적발액은 2000년 이래 125% 이상 증가되었으며, 중국과 관련하여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에 제소된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은 지난 5년간 그전 5년에 비하여 80% 이상 증가하였음.
-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미국 국경의 검색 강화를 통하여 위조, 해적판 및 저임 혹은 무임의 불법·강제 노역자(교도소 수감자 포함)를 이용해 생산된 상품의 적발과 수입규제를 강화할 것임을 밝힌 바 있음.

□ 미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에 위배되는 상품 수입 제재의 강화

- 중국으로부터 생태계 파괴종의 수입이 증가됨에 따라 미 국경에서의 중국산 동식물 수입 관련 통관 절차를 강화하고, 중국의 식품 안전 시스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
 - 중국 내 농산물 생산과 관련하여 미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 SPS) 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사전 감시를 강화함.
 - 중국의 동식물 수입 허가 요청과 관련하여 동 품목의 수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가능성 등에 대한 위험요인 분석을 강화하고, 항구 검사를 강화하였음.

3. 불공정 무역 관행 및 제도의 개선

□ 자국 산업 보호 명목의 보조금 지급 철폐

- 중국의 국영 기업 및 은행 등에 대한 불공정 보조금 지급, 보조금 지급에 대한 WTO 통보 의무 불이행 등과 관련, WTO 규정 및 2005년 미-중 통상합동위원회(JCCT) 협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내·외국기업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음.
- 이에 따라 미 정부는 중국 및 미국 시장 내 공정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각종 수출 보조금 및 농산품 생산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철폐하도록 중국 정부에 보다 강도 높은 요구를 할 예정임.

□ 지적 재산권 보호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 압력

- 지적 재산권 관련 산업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의 미비 및 관련 법 집행 절차의 불투명성이 중국 내 지적재산권 침해의 가장 큰 원인이자, 중국의 자국내 취약 산업을 보호하는 수단이며, 중국

내 비경쟁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수단이라고 판단하였음.

- 이와 관련. 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의 준수를 촉구하고, 관련 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없는 경우 WTO에 적극적인 제소 및 양국간의 심각한 무역마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속 경고하고 있음.
- 미국 특허청은 북경과 광저우에 미국 시민 2명과 현지 직원으로 구성된 추가적인 지적재산권 전담관을 배치하여 중국 내 지적재산권 집행을 지원할 예정임.

□ 환율 조작 근절

- USTR의 룩 포트만 대표는 중국의 환율 조작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WTO에의 제소 등 다양한 방안을 동원할 것임을 밝힘.
- 그러나, 미 의회의 중국의 환율 조작에 대한 강력한 보복 관세 법안 상정에 대해서는 미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바 있음.

4. 미-중 통상 이슈에 대한 사전적 발굴

□ 중국 통상 정책 의사 결정과정상 미 정부의 사전적 참여

- 중국의 통상 제도 및 관례의 변화에 대한 사전적이고 종합적인 정보 입수 및 분석 능력을 제고하고, 중국의 WTO 의무 준수 여부(지적재산권 보호 문제, 보조금 문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에 대한 감시와 평가를 강화함.

- 통상 현안에 대한 정부 부처간에 조율된 합동 대처를 통하여 중국 정부에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관련 정책 입법 과정에서 사전적인 참여를 통해 미국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시켜 통상 마찰을 최소화함.
- USTR은 내부에 중국 통상정책 전담 TFT를 구성하여 산업별로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정보를 총괄적으로 수집하고, 미-중 통상 관련 잠재적인 분쟁사항을 점검하여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통상 협상을 이끄는 역할을 담당하게 함.

5. 신규시장영역 개척 및 수출 진흥

□ 수출 전략 지역 및 제품의 다변화 추구

-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개선과 더불어 미국의 대중 수출 전략의 변화를 시도함.
 - 인구 밀도가 높은 주요 연안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수출 지역을 이외의 지역으로 확대하여 다변화시키고,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및 수출 기회에 대한 친숙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을 계획함.
 - 미국의 안보에 대한 우려를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을 극대화 하며, 미국이 경쟁력이 있으면서 중국의 실제 및 잠재 수요가 있는 새로운 분야의 수출을 촉진함.

III. 영향 및 대응 방안

- '06년 2월 발간 USTR의 '미-중 통상관계(U.S.-China Trade Relations)'보고서는 중국 후진타오 주석의 4월 방미를 앞두고 미국의 입장을 보다 강경하게 표명하여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압박용이라는 분석도 있음.
- 그러나 누적되는 무역적자로 인한 미 의회의 보호주의 및 고립주의 성향이 강화되는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러한 미국의 통상정책 방향의 전환은 우리나라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대중 통상 정책 변화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2006년에 있을 한-미간 주요 통상 이슈의 동향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1. 영향

□ 부정적 측면

- 한국의 대 중국 경제 교류는 수출과 투자의 동행성이 강하여, 미국의 대중 통상 압력은 직간접적으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및 중국 진출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품에서 중국 내 가공 후 재수출되는 중간재 및 부품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이 감소하는 등의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임.
 - 또한 전체 해외직접투자 중 중국투자가 건수 기준으로 48%, 금액

기준으로 20%를 넘는 바('05년 12월말 현재)⁶⁾, 대중 통상 압력은 중국 투자 한국기업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주요 무역적자 대상국인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 압력도 병행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05년도 대한 무역적자는 US\$ 161억으로 '04년에 비하여 약 20%정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한국은 미국의 12대 무역적자 대상국으로 중국과 함께 통상압력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음.⁷⁾
 - 그러나 한국과 미국간의 FTA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다양한 통상 협상 채널이 열린 점을 감안할 경우, 단시간 내에 우리 상품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와 같은 특정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세계 제조업의 아웃소싱 중심지로 자리 잡은 중국에 대한 통상 압력이 현실화 되어 보복성 관세 법안 등이 입법화 될 경우, 세계 경기 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긍정적 측면

- 대중 통상 압력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반사이익이 예상됨.
 - 중국의 위안화 환율조작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산에 대한 27.5%의 일괄관세 부과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국산과 대미수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품목의 수출 증가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임.

6)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

7) 자료: World Trade Atlas

- 그러나 미국의 중국 내 지적 재산권 집행 강화와 관련해서 우리 기업이 받는 손해는 제한적일 것임.

2. 정부 및 기업의 대응 방안

가.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

□ 글로벌 경영 환경을 감안한 총체적인 대응책 마련

- 기업 경영이 단순 수출 중심에서 해외 아웃소싱을 통한 글로벌 경영으로 전환되고 있어 선진국의 대중 통상압력 강화는 대중 생산아웃소싱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음.
- 또한 위안화 가치가 추가적으로 급격히 절상될 경우, 중국을 제3국 우회수출기지로 활용하는 기업 및 중국으로부터 원자재 및 중간재를 수입하는 기업 등의 손실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 효과적인 통상 협상을 위해서는 글로벌화 된 경영환경을 면면이 분석하고 제3국 통상 정책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전문가 그룹을 육성, 이를 중심으로 일원화된 정보조사와 전략 수립이 필요함.

□ '06년 미국의 주요 대한 통상 이슈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철저한 준비

- 미국 정부와 각종 이익단체는 한-미 FTA를 양국의 통상관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미 FTA 체결 협상을 앞두고, 치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06년 미국의 주요 대한 통상 이슈를 산업별로 점검하는 것도 필요함.

[한-미 주요 통상 이슈]

- | | |
|---------------------------------|--|
| · 지적 재산권 보호 제도 | · 정부 보조금 문제 |
| · 승용차 교역 불균형 | · 농업 분야 현안(쇠고기 시장 완전 개방, 쌀 시장 개방 정도 및 식품 표준 등) |
| · 국산 의약품에 유리한 의료수가 규정 및 임상실험 규정 | |

나. 기업 차원의 대응 방안

□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의 재구성

- 우리 기업들이 중국을 주로 제3국 우회수출을 위한 단순가공기지로 활용함에 따라, 대 중국 국제통상마찰 발생시마다 휘둘리는 경향이 높음.
-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을 단순 가공기지로 활용하는 데에서 벗어나 중국 내수시장 공략과 제3국 수출 시장 공략의 비율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관리가 절실함.

□ 해외 소싱 포트폴리오의 재구성

- 우리나라의 대중 직접투자는 금액 기준으로 23%가 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26%)을 제외한 국가의 경우 한 국가에 5% 이상 집중된 곳이 없음.
- 이러한 편중된 투자구조는 제3국의 대중 통상 압력이 강화된 경우 국내 경제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취약한 구조로, 소싱 포트폴리오를 여타 신흥 경제성장국으로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음.

작 성 자

- | | |
|----------|--------|
| ◆ 워싱턴무역관 | 임성주 과장 |
| ◆ 해외조사팀 | 이해인 대리 |